



제14회 국제탄소 페스티벌(ICF)이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북의 탄소산업,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역사가 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하여 제크(JEC)그룹 에릭 피에르장 회장,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등 참석자들이 탄소제품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전북도, 국제탄소페스티벌 열네번째 막 올라

전북도에서 태동한 탄소산업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13일 전북의 탄소산업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국제탄소 페스티벌의 열네번째 막이 올랐다. 도가 주최하고,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주관하는 국제탄소 페스티벌(ICF)은 '전북의 탄소산업,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의 역사가 되다(The Carbon Industry of Jeonbuk, becomes History of Korea's Carbon Industry)'라는 주제로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17년부터 세번째로 프랑스 복합소재 전문기업인 제크(JEC)와 공동개최하는 전시회로, 전 세계 40개국 250여 기업이 참가하며, 7,500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권 최대의 국제복합소재 전시회이다. 국제탄소페스티벌은 2016년까지 전북도청 일원에서 매년 개최해 왔으며, 제크 아시아(JEC ASIA) 전시회와

2016년까지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왔으나, 전라북도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7년 제크 아시아(JEC ASIA) 전시회를 한국으로 유치했으며, 한국 탄소산업의 메카인 전라북도와 함께 공동 개최하게 되었다. 제크(JEC)그룹은 전 세계 96개국, 25만명의 복합소재 전문가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는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며, 제크 아시아(JEC ASIA) 전시회는 제크(JEC)그룹이 개최하는 아시아권 복합소재 전시회이다. 이날 개최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제크(JEC)그룹 에릭 피에르장 회장,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국내외 기업인,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탄소페스티벌과 제크 아시아(JEC

ASIA) 전시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서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역사를 써왔다"며,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북이 소재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여 세계 탄소융합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도는 한국무역협회와 탄소산업 발전 및 탄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탄소기업들이 무역협회의 해외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수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창출형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도내 탄소기업에 대한 해외 시장 정보 및 마케팅 능력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제탄소페스티벌에서는 탄소산업의 기술동향과 기업 상용화를 소개하는 국제탄소페스티벌(ICF) 포럼, 국제탄소페스티벌(ICF) 특별관,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김진성 기자

인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해 "정보주체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에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태도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상업적 활용 확대 등을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7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

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기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하면 이후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스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학장(강정원)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제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명강사 초청 무료 공개 특강

도민 여러분!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재미있고 중요로움이 있는 특강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이미지시대, fun의 시대, 소통의 시대에 본 강의를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며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 용혜원 강사 : 김양욱

-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
- 유머 자신감 연구원장
- KBS TV 아침마당 등 인기 강사
- 2009년 한국강사협회 추천 명강사
- 강의주제: "딱 한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실기 강사
- 한국스피치&이더럴 컨설팅 대표
- KBS TV 아침마당 출연 등
- 강의주제: "전장을 위한 스피치"

◎ 일 시 : 2019. 11. 21.(목) 오후 7시
◎ 장 소 : 참예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칠길굴다리 앞)
(장소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완주김제축협)
◎ 문의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스피치·면접·리더십 컨설팅
전북도내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완주생강의 600년 역사, 빛을 발하다

전통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브랜드가치 제고 ·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지난 12일 농식품부가 농업유산지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에서 2017년 부안 전통 양잠농업시스템에 이은 두 번째, 전국에서는 열세 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탄생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역사적인 사료에 의한 완주지역 토종생강 생산기록과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완주지역민의 '온돌식 토굴 저장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돌식 토굴 저장방식은 세계에 유래가 없어 세계농업유산에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완주에서는 466농가가 111ha에서 1,176톤의 생강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20% 정도는 아직도 온돌식 토굴을 활용한 씨종자 보관 방식으로 토종생강을 보존·생산하고 있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국비 14억원이 지원되며, 전라북도와 완주군에서는 유산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 자원화하고, 완주생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품장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 준비를



통해 세계농업유산에도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존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까지 12개의 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김진성 기자

법률 근거 없이 권익침해 조례 230여건 일제정비

행안부, 지자체에 정비 권고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자체규를 일제히 순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자체규 230여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정비하도록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현실적 필요성과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자체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정비하게 될 지자체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도 정비한다. 이 규정은 지자체 의회가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대법원 2007추134 판결)을 받은 경우다. 대법원은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이다. 현행 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용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지자체규를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지자체규를 지속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권익위, '자소서 대필' 제보한 공익신고자 보호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보호에 나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존 284개의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 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주요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등 신고자 보호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존의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내년부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

생과 경제와 관련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한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에 산재한 불공정·갑질 지침들을 발굴·정비해 국민 고충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집권 전반기 성과와 관련해 ▲반부패 개혁 ▲생물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불공정·갑질 개선 ▲국회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스